

원자력사업 추진체제 조정 —사업이관 경위와 결말—

정 기 진

한국전력공사 전 방사물사업인수반 부장

제245차 원자력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진된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이 96년 말로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이 모두 산업체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월 3일에는 한국전력기술(주)의 「원자로설계개발단」이, 1월 9일에는 한국전력공사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이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각각 개소식 및 개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번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지난 10여년간 논

란이 되어 온 우리 나라 원자력 산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소되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의 세계 무역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내 원자력 산업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작업의 추진 배경, 추진 경위, 조정 결과 등을 요약·정리해 본다.

정

부는 84년 7월 원전 경제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원자력 발전 기술 자립 촉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정부 및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에 대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당초 한국전력기술(주)에서 수행키로 되어 있던 원전 설계 업무를 당시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던 한국원자력연구소로 하여금 수

행토록 85년 7월 제214차 원자력위원회에서 기관별 업무 분담이 확정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원전 설계(노심 설계 포함)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때 자립된 상용 기술은 산업체로 이관한다는 것이 전제였다.

이러한 기관별 역할 분담 원칙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사업 기능의 산업체 이관 논의는,

89년 동력자원부와 과학기술처간의 「원자력 행정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 동력자원부는 원자력 발전 사업 관리를 담당하고, 과학기술처는 연구 개발 및 안전 규제를 관장키로 결정한 후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92년 6월 제230차 원자력위원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설계 업무를 산업체로 점진적으로 이

관토록 결정하였으나 95년말까지의 추진 실적은 부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6년 1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시 대통령의 원자력 사업 체제 조정 검토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정부 관계 부처, 한국원자력연구소, 산업계 및 각계 전문가들의 협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원자력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원전연료(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정 방안을 수립하였고, 96년 6월 25일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사업 이관 추진

정부의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방안」에 따른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이관을 위하여, 정부 주도로 학계 전문가와 인계·인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원전사업이관 추진위원회」가 96년 7월 구성되어 운영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관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계·인수 기관은 실무 책임자 각 5명으로 구성된 합동 작업반을 운영하였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는 사업 이관 쟁점 사항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조정 기구를 설치하여 이관 기준일까지 확보한 원전 기술을 유지·발전시키고, 진행중인 사업(울진 3·4호기, 영광



원자력환경기술원 개원(97. 1. 9)

5·6호기, 월성 2·3·4호기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정부의 인수 원칙을 준거로 하여 이관 쟁점 사항을 신속히 조정하고 96년말까지 사업 이관을 완료한다는 기본 전략하에 이관 작업을 추진하였다.

방사물 관리 사업의 이관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방사물 관리 사업 및 인력을 인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방사물사업인수반을 구성하였다.

그 하부 조직으로 인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한 인력관리실무팀과 방사물 관리 사업 이관에 따른 법령개정팀을 구성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실무 협의에 대비하였다.

인계반과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인력 인수의 기본 방침을 확정하여야 했는데, 현 처우 수준 및 정년을 보장하라는 정부 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향후 회사 경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수 인력을 처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다.

협의 결과 이관 인력은 별도의 직장(職掌)인 원자력환경직으로 수용하고, 부사장 직속의 원자력환경기술원을 신설하며, 인사 체계는 기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체계를 따르고 급여 차이는 조정 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하였다.

또한 퇴직 급여 총당금을 인수하여 퇴직금을 승계하며, 현 정년을 보장하는 등 실무 최종 합의를 96년 10월

15일 도출하였고, 11월 15일 이사회를 거쳐 12월 16일 이관 사업에 대한 양수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당초 목표인 96년말까지의 이관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중·저준위 방사물 처분 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의 건설 및 관리 업무, 원자력발전소 이외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물의 위탁 관리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관련 채권, 채무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인력 포함 총 159명이 한국전력공사로 이관되었다.

사업 이관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의 방사물 관리 사업 이관 방

침에 의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하던 방사물 관리 사업을 한국전력공사가 인수하여 수행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물 관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96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법률안은 방사물 관리 사업자로 한국전력공사를 지정하여 방사물 사업 수행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방사물 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다.

원자로 계통 설계 사업의 이관

이관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한국전력기술(주) 실무자간의 합동 작업반 회의는

96년 7월 2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총 10여회에 걸친 실무 회의가 진행되었다.

실무 회의시 주요 쟁점 사항은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영 구조 개편 및 이관 인력의 처우 문제였으며, 실무 협의시 업무뿐만 아니라 인력·기술 및 자료가 함께 이관되고 이관 직원의 신분, 정년 및 처우 수준, 업무 환경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실무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사업 이관 세부 추진 계획을 96년 9월 확정하여 세부 실무 작업을 추진한 결과, 동년 10월 인계·인수 기간간 주요 이관 세부 사항들이 합의되었다.

확정된 세부 추진 계획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주)는 사업 인수 이사회를 11월 20일 개최하였으며, 12월 초에는 정부 및 한국전력공사의 중재로 사업 정산 방법 등 이관 관련 최종 쟁점 사항들이 완전 합의되어, 96년 12월 16일 양수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6년 12월 31일까지의 이관 작업이 완료되었다.

조정 작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원자로 계통 설계 업무 및 성능 보증 등 관련 A/S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계약 및 채권, 채무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인력 포함 총 344명이 한국전력기술(주)로 이관되었다.

(표 1) 방사물 관리 사업 관련 관계 법령 개정의 주요 골자

대상 법령	주요 내용
원 자 력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후 연료의 처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처 장관이 통상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 방사물 관리 사업 허가 제도를 방사물 관리 시설 등의 건설·운영 허가 제도로 전환하여 운영 · 방사물 관리 사업 이관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금 폐지 · 원자력 연구 개발 기금의 신설
전 기 사 업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물 관리 사업자로 한국전력공사 지정 · 한국전력공사 이외의 방사물 발생자에 대한 방사물 관리 위탁 및 비용 부담 근거 조항 신설 · 통상산업부 장관은 방사물 관리 대책을 과학기술처 장관과 협의·수립하여 원자력위원회 심의·의결 후 시행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물 관리 시설을 발전소 주변 지역에 포함(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 및 시설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
전 원 개 발 에 관 한 특 례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원 설비에 방사물 관리 시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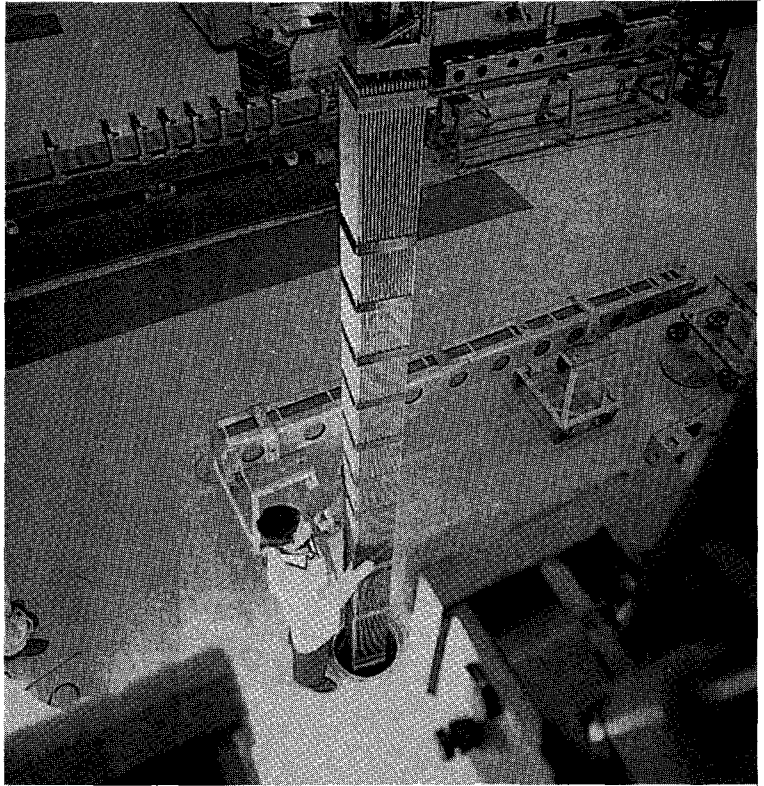
원전 연료 사업의 이관

핵연료 설계 및 제조 사업의 이관은 제24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의결되었다.

즉 핵연료 초기 노심과 재장전 노심 설계 사업 이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업무 및 인력을 조정하며, 중수로 연료 제조 인력은 최대한 한국원전연료(주)로 이관토록 하고, 그렇지 못한 인력에 대해서도 통상산업부 책임하에 원자력 관련 산업체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사업이관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핵연료 설계 업무 및 인력의 인수 기관을 한국원전연료(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사업 이관 추진 일정 및 이관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실무자 회의 및 총 11회의 인계·인수 기관간 합동 작업반 회의를 통해 처우 및 복지 등 이관에 필요한 제반 사항이 최종 합의되어, 96년 12



한국원전연료(주)에서 수행하고 있는 원전 연료 집합체 최종 검사 장면

월 16일 양수도협약이 체결됨으로써 96년 12월 31일부로 이관 작업이 완료되었다.

이관된 주요 내용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수행하던 핵연료 설계 관련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산, 부채, 계약 및 채권, 채무와 계약상의 모든 권리·의무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인력 62명이 한국원전연료(주)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중수로 연료 제조 분야의 경우 시설 건물 및 부지의 소유권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신규 핵연료 연구 시설을 확보하여 연구 시설을 이전하는 시점에서 한국원전연료(주)

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종사 인력은 한국원전연료(주)에 38명,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기술(주)에 각각 11명씩 이관되었다.

지난 10여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연구 개발 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내 원전 산업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체결에 따른 원전 시장의 대외 개방에 대비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됨으로써, 국내 원전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해외 수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표 2) 원자력 사업 추진 체제 조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물 관리 사업 및 인력(159명)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로 계통 설계 업무 및 인력(344명)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기술(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연료 설계 사업 및 인력(62명)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전연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로 연료 제조 업무 및 인력(38명)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원전연료(주)